

다산포럼

정지창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회갑은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하다. 흔한 다산사가 되어버렸다. 근자에는 회갑잔치도 없어지고 회갑기념 논문집도 사라졌다. 잘된 일이다. 둘 다 당사자에게 썩스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찮은 일이니까.

그런데 평균 수명은 늘어난 반면 정년은 짧아져 요즘엔 회갑 넘어서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

대부분의 직업인들이 회갑을 맞이하기 전에 장년이나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보통이니 팔자같이 회갑을 넘겨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행운이라든 행운이겠다.

1000m 산에선 누구나 친구

직장 없이 회갑을 맞은 친구와 함께 얼마 전 내팔 여행을 다녀왔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40대 젊은이까지 셋서 보름 동안

안 안나푸르나 지역을 트레킹했다. 현지 안내인 한 명과 짐꾼 두 명이 합류했지만 대개는 짐꾼들이 한참 앞서고 우리 넷이서 쉬쉬쉬 뒤를 따라가는 단출하고 호

회갑에는 등산을!

젖한 산행이었다.

해발 1천m에서 4천200m까지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정이라 고소증도 겪지 않았다. 주변의 경관이야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신비스러웠는데, 그보다 좋은 것은 오가는 내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웠다는 점이다. 일행 모두가 친구처럼 허물없이 친하게 된 것은 고산이 주는 축복일 것이다.

해발 1천m가 넘는 고산에서는 누구나 말을 놓는 친구가 된다는 독일 속담을 인

용하면서 이 말을 해준 선배 얘기도 들려 주었다. 그는 독일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알프스에 몰렸다. 하산길에 후배들을 먼저 보내고 뒤처져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부모를 모시고 선배를 대접하는 것은 동양적인 미덕인 줄 알았는데, 나이 많은 부모나 선배를 모시고 트레킹하는 서양 사람들이 드물지 않은 것을 보고 내심 놀랐다.

우리는 기껏 나이드는 부모님을 여행사에

우리들 사이로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인다. 잠이 안 오면 편지를 쓰든가 등산지도를 보며 일정을 정리해 본다. 산속이라 편지는 물론 부칠 수 없다.

산을 내려와 도화지에 오니 영자신문이 보인다. 한국의 총선 얘기는 없고 교도소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을 발가벗겨 조사하던 관행을 폐지한다는 뉴스만 서울말로 짧막하게 실려 있다. 밑고 높은 데라 무거운 소식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천천히 걸으며 얘기하는 재미

회갑에는 친구나 가족끼리 적어도 해발 1천m가 넘는 산길을 며칠 동안 함께 걷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내에도 영남 알프스를 비롯하여 지리산, 거창 일대, 제주도, 설악산 등에서 고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체력은 걱정할 것 없다. 일행 중 제일 못 걷는 사람에 맞춰 천천히 걸으면 된다. 천천히 걸으면 심심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트레킹의 좋은 점이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다산연구소 제6)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서미정



지난 20일은 '제28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여기저기 장애인을 위한 비주체적인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올해도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

이날 만큼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 하루이다. 365일 고용, 교육, 문화, 정보 접근 등의 사회 전반적으로 배제당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만 되면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대중매체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며 기사거리를 찾아 난리법석을 떠난다. 시민들의 동정을 살판한 적당한 대상자를 찾아서 보

라 장애인 복지의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다. 이 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인권보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장애인정책이 동종과 시혜였다면 이제는 인권적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적 기반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

'장애인의 날'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다

도하기 급급하다. 나는 소망한다. 장애인의 날 자체가 장애인 차별임으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없어지기를 소망한다. 장애가 없는 무장애 나라에서 장애를 느끼지 않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이것은 나만의 소망이 아니라 500만 전체 장애인(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복지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사회적 현실은 아직도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아 매일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40%에 달하고, 70% 이상의 장애인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다. 이것이 우리나라

는 것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는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소중한 약속이고, 의지인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실천하지 않는 법은 선언에 불과하고 법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이 필요하다. 작은 노력들, 작은 실천들을 시작으로 장애인 모두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매년 실시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그 날이 도래할 것이라 믿는다. <(사)사랑모아가족복지회 회장>

국민 건강안전권 포기한 미 쇠고기 개방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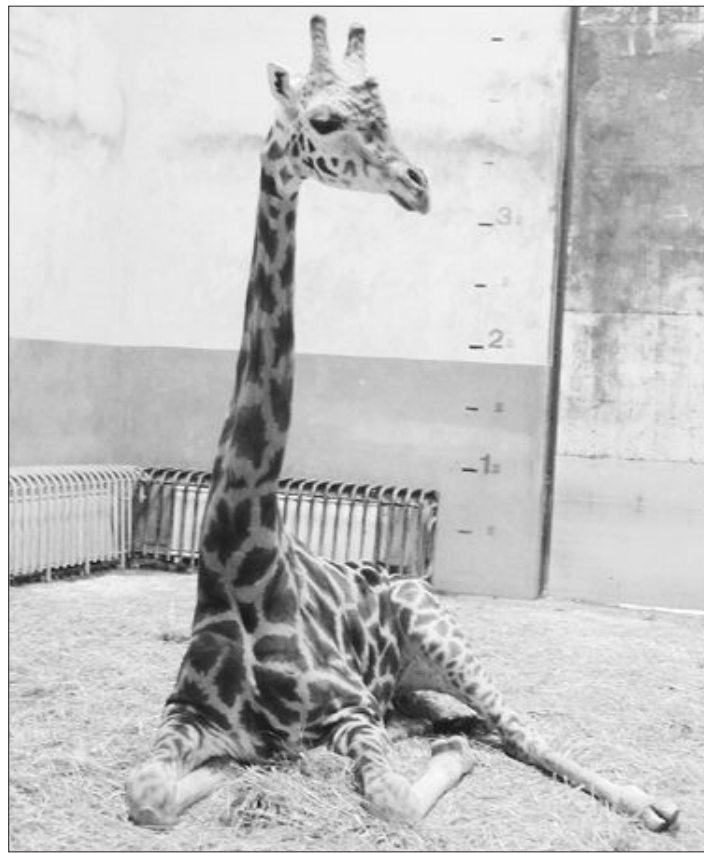
정부가 결국 미국 쇠고기 앞에 백기 투항했다.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 안전권을 포기했으니 충격을 넘어 그저 혀랄할 뿐이다.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등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다음 달부터 허용하고, 나중에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전면 수입중단 조치가 아닌 미국의 역확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를 그냥 먹으라는 얘기다.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협한 치욕스러운 합의가 아닐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 미국조차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높아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쇠고기 연령 제한을 철폐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광우병 소의 99%가 30개월령 이상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고 무엇을 얻었다 말인가. ▲김정수·광주시 북구 운영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



기린도 눕는다



동물 책을 읽다 보면 현장에서 보는 현실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물론 그 진실은 책이 아닌 당연히 현장이다. 책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책은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만큼 일상적인 현상을 기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보니 솔직히 동물 관련 책들은, 동물학자들의 책보다 사냥꾼 이야기나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사육사, 조련사)의 책에서 문투는 거칠어도 훨씬 더 재미있고 농치기 쉬운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 필자 또한 오랫동안 광주일보에 연재되었던 '사냥꾼 이야기'를 보면서 야생동물 수의사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서두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 기린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보통 동물 책에서는 기린은 결코 눕거나 앉지 않고 심지어 잠도 안 자는 동물로 묘사돼 있다. 항상 긴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란. 그러나 보다시피 기린은 앉기도 하고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자기도 한다. 대개의 초식동물들이 그렇듯 그 잠은 깊은 잠이 아니고 살짝 졸다가 조그만 소리에도 깨는 선잠에 가깝다.

물론 야생에서와 사육에서의 조건이 다르다는 말도 맞다. 그렇다면 조건이 달라졌을 때는 이리저리할 수도 있다고 해 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비록 야생일지라도 케냐의 국립공원같이 잘 보호받는 곳에서는 기린도 앉아서 편안히 쉴 수도 있는 것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리 보장해야

불법 체류자 대부분은 3D업종에서 일을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법 체류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말이다. 이들은 일용직 파견업체에 나가 일거리를 얻어 일을 하지만 보험이나 퇴직금은 없다. 이들은 월급으로 받기보다는 그날 그날 일당을 받는 일용직을 택한다. 그 이유는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약용해 월급을 주지 않거나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주는 수법으로 이들을 갈취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일하는 작업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된다. 그러다 다치거나 하면 산재보험이나 의료 혜택을 얻어도 내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나기까지 한다. 물론 불법 체류는 법적으로 잘못이다. 하지만 이들을 고용했다면 고용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들에게 한국인 인권유린 국가로 기억되지 않도록, 반한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이나 직업교육은 물론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최혜경·광주시 동구 신수2동

시설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있는 건가

혁신도시 재검토 등 새 정부의 지방 확대 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행정기관과 의회는 물론 경제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을 내고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도 지난 20일 정부의 정책을 집중 비난했다.

비수도권은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확산되면 국론 분열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근본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역균형발전에는 부정적이다. 공공기관의 성격이나 기능을 무시한 채 지방에 '나뉘 먹기'로 배분하는 혁신도시도 지역경제

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비효율만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을 들쭉날쭉 한 혁신도시에 대한 입장도 애매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재검토'가 아닌 '보완'이라고 말했고 한승수 국무총리는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일변무라고 있다. 지방의 반발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는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효율성 등 경제논리보다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이전을 약속했다.

수도권 규제는 풀면서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지방 죽이기'에 다를 바 없다.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경쟁을 벌여 자생하라는 것은 억지 논리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 '보완대책' 실효성 의문이다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수입산의 국산 단감을 막아 한우가 품질로써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장려금 지급과 도축세 폐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재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원산지 단속이다. 정부는 원산지 단속 강화를 위해 식약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400명인 농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를 1천여명으로 늘리자 해도 수많은 식당이 취급하는 다양한 종류의 쇠고기 원산지를 연중 상시적으로 점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인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

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규정도 그대로 뒤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원산지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격 경쟁에서 뒤진 한우농가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양소 장려금 지급은 전체 가임 양소의 10%에 불과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 역시 지난 2006년 폐지됐던 것을 다시 부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도축세 폐지나 음식점 원산지 단속 등은 지난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후 약속했던 정책으로 실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재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들어갈 예산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생색내기 대책으로는 도산 위기에 빠진 축산농가를 살릴 수 없다. 쇠고기 유통구조 개선, 사료 값 안정,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 등과 같은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無等鼓

지나간 일이지만 지난해 12월 대선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자신의 20대 핵심공약중 20번째로 '토빈세(稅) 도입'이라는 꽤 어려운 공약을 내 걸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90년대 말 금융위기를 IMF(국제통화기금)와 미국, EU(유럽연합)의 잘못과 무관심, 오만으로 경제난을 겪었는데 향후 위기 대처를 위해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말도 맞다. 그렇다면 조건이 달라졌을 때는 이리저리할 수도 있다고 해 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비록 야생일지라도 케냐의 국립공원같이 잘 보호받는 곳에서는 기린도 앉아서 편안히 쉴 수도 있는 것이다.

토빈세



동아시아 통화기금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유행하는 악성 투기자본 이동에 세금을 물리는 토빈세를 제안했다.

동아시아권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적 해계모니를 분쇄하기 위한, 피치배 국가 간 경제적 연대를 강조한 민노당다운 진보적 정책이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관심을 보였을까 정작 유권자들에게는 낯선 단어였다.

최근 들어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토빈세가 또다시 전세계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 경제학자로 1981년 노벨 경제

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기 20년 전인 지난 1978년, 외환투기를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외환거래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하자 했는데 그게 토빈세다. 야스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국제단기자본이동에 세금을 걸어 빈부 격차 해소에 쓰자는 것이었다.

엔은 전 세계 금융 거래에 0.01%의 최소 세금, 즉 토빈세를 부과해 개도국 신흥위기를 해소하자고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반 총장도 세계를 돌며 식량구호 자금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 시행되면 1년에 거금 2천300억달러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금융거래 과세는 이미 70년 전 경제학자 존 케인즈가 주장했고 토빈이 뒤이어 제기했지만 선진국의 반발이 워낙 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유권자들의 무관심처럼 토빈세 논의가 이번에도 선진국의 외면으로 공론에 그칠 것 같다. /기현호 경제부장 kih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주국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 화 홍 보 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제 부 2200-616	어 려 면 제 부 2200-628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구독료 월정 3,000원 1부 400원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